

## ■ 정책동향

### 산업기술開發사업 지원 강화

정부는 산업기술개발 용자사업의 대출금리를 1% 인하하는 한편 과제별 지원한도액을 3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지원지침을 확정 공고 했다.

이번 지원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해 용자금리를 지난해

의 7%에서 올해에는 6%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과제별 지원한도액을 시제품 20억원, 첨단기술제품 10억원 등 총 30억원까지 확대해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 기계류 등 핵심 자본재 및 첨단기술 제품의 국내개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도 자금난 등으로 사업화가 늦어지고 있는 우수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기술(제품)개발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선

통상산업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의 확대, 지원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개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올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원액을 지난해 1,297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하며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도 예년의 연간 1.2억원에서 올해에는 최고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기간을 종전의 1-3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 신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경쟁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초기단계에서 민간기업 참여가 어려운 신산업기술(Emerging Technology) 및 원천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없이 연구소 등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업무수행을 가능토록 했으며 동일한 기술과제라도 관련산업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성이 큰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연구에 의한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복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연구개발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전체적으

로 18.45-35.4% 인상하는 한편 기술개발사업 완료후 정부에 상환해야 할 기술료도 50% 이하로 경감하되 기반성격이 강한 기술이거나 기술개

발후 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연구성과가 곧바로 사업화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기술료 징수를 종전의 50% 일률 적용에서 면제키로 했다.

## 공장설립 代行센터 본격 가동

공장입지 선정에서 부터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 등록에 이르기까지 공장설립에 따른 전 과정을 인·허가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일괄대행 처리해 주는 ‘공장설립대행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공장설립대행센터는 통상산업부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간의 창업 초기 단계에 공공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까다롭기로 소문난 공장설립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5개 지역본부에 설립된 기구다.

공장설립 대행센터에서는 훈련된 공공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공장설립절차를 일괄대행하는 획기적인 서비스체제를 도입하고 공장설립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청과 건설교통부, 농림

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공장설립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된다.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이같은 일괄서비스를 통해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10-15일 이내에,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20-25일 이내에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준농림지 등 토지이용 규제가 많은 지역의 전문대행사에 위탁해 1천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약 1천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이용할 경우 인·허가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가능해 창업기업들이 창업초기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출입 承認制 개편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수출입 승인제가 대폭 개편된다.

즉 인적자격, 물품의 이동,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전의 승인요건이 무역업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인적자격에 대한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이 수출입 승

인요건에서 제외됨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승인절차에서 배제된다.

또 수출입승인 대상이 모든 수출입 물품에서 수출입공고·수출입별도공고 등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대폭 축소되고 수출입 승인기관도 이들 수출입 관련공고에서 지정·고시한 관·단체로 일원화된다.

## ■ 수출입 승인기관

기관·단체명	설립근거법령	대상 품목
한국기계공업 진흥회	공업발전법	산업설비수출
한국전기공업 진흥회	공업발전법	발전세트 전기기기

종전에는 수출입관련 공고에서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수출입 추천을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령하에서는 수출입관련 공고에서 지정한 기관 및 단체가 추천과 승인을 한데 묶어 곧바로 승인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 전기제품 電磁波장해(EMI) 기준 적용

올해 전자교류개폐기 등 20개 전기제품에 대한 전자파장해(EMI) 기준이 제정돼 적용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연내 20개 전기제품의 KS규격에 EMI관련 규격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이들 제품의 KS표시허가는 EMI관련 규격을 갖춘 품목에만 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EMI관련 한국산업규격(KS C 0262)은 지난해말 전기냉장고 등 9개 품목에 대해 제정돼 시행중에 있다.

기술품질원은 중소기업의 EMI시험관련 비용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품질원과 시험설비 사용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한해 시험수수료의 절반을 깎아 주기로 했다.

기술품질원의 KS품질에 대한 EMI기준제정은 국제무역에서 전자파 장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현재 유럽연합(EU)이 강제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새로 제정될 EMI기준은 수입품에도 적용돼 수입품이 KS규격을 획득하려면 EMI규격을 갖춰야 한다.

## 團體隨契, 기술·품질 위주로 배정

앞으로 기술이나 품질면에서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에서 우대를 받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 계약물품 지정추천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을 전면 개편, 단체수의계약 물

량배정 기준을 기술 및 품질위주로 바꿨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기준에서 품질수준 배점을 최고 55점(기존 45점)으로, 신기술개발 점수를 최고 26점(기존 20점)으로 각각

높였다.

또 협동조합이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청구한 단체수의계약 수수료에 대해 기술개발, 품질향상 및 수출시장개척 분야의 의무사용 비율을 상향조정(15%에서 20%로)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의 물량배정 방법과 관련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됐던 '연합회가 지방조합의 회원사를 직접 선정해 물량을 배정'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조합과 지방업체의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도 강화됐는데 품목별 연간 최저계약금액이 전국조합은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조합은 2,500만원에서 3천만으로 각각 높아졌다.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엔 이듬해 물품지정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권한을 통상산업부로 부터 이관받음에 따라 올 상반기중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기청, 국산기계 外貨貸出 확인 발급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을 지원받아 기계 설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대상품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3월 중순부터 과천 본청과 11개 지방청 및 사무소에서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품목확인서 발급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화대출품목확인서는 그동안 기계공업진흥회, 전기공업진흥회 등 9개 생산자 단체에서 발급해 왔는데 이들 단체가 서울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중기청이 확인서 발급을 통해 지원할 올 외화대출자금 규모는 약 6억달러(5천억원)다.

한편 올해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지원 총규모는 30억달러이며 중소기업에는 기계구입금액의 100%(동일인한도 1,500만달러)까지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리보+1.5%포인트. 최근 리보금리가 5.5% 수준이므로 대략 7%선에서 은행들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